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 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 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 고령화 속도 : (2022년 고령자 비율 - 2015년 고령자 비율)/7년

<광역 시도별 고령자 인구 특성>

	2022년			2015년			고령화 속도 (2015~2022)
	인구	고령자비율	노년부양비	인구	고령자비율	노년부양비	
전국	51,692,272	17.7	24.9	51,069,375	13.0	17.6	0.677
서울특별시	9,417,469	17.4	23.8	9,904,312	12.3	16.3	0.725
부산광역시	3,295,760	21.3	31.1	3,448,737	14.5	19.7	0.968
대구광역시	2,366,852	18.3	25.9	2,466,052	12.6	17.1	0.807

인천광역시	2,989,125	15.4	21.2	2,890,451	10.7	14.2	0.684
광주광역시	1,468,972	15.4	21.3	1,502,881	11.1	15.0	0.620
대전광역시	1,473,662	15.8	21.7	1,538,394	10.7	14.3	0.727
울산광역시	1,110,516	14.6	20.0	1,166,615	8.7	11.4	0.839
세종특별자치시	382,589	10.1	14.2	204,088	10.3	14.7	-0.040
경기도	13,717,827	14.5	19.9	12,479,061	10.4	14.0	0.583
강원도	1,528,037	22.3	33.2	1,518,040	16.8	23.8	0.791
충청북도	1,624,993	19.2	27.5	1,589,347	14.5	20.2	0.665
충청남도	2,193,214	19.6	28.5	2,107,802	15.8	22.5	0.538
전라북도	1,774,248	22.6	34.0	1,834,114	17.7	25.7	0.706
전라남도	1,771,431	24.7	38.4	1,799,044	20.7	31.3	0.574
경상북도	2,620,373	23.0	34.6	2,680,294	17.5	25.0	0.789
경상남도	3,280,829	19.0	27.6	3,334,524	13.6	18.9	0.774
제주특별자치도	676,375	16.7	24.0	605,619	13.8	19.6	0.41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15, 2022년은 각 연도 인구센서스, 저자 직접 계산.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 상위 20개 시군구>

	2022년			2015년			고령화 속도 (2015~2022)
	인구	고령자비율	노년부양비	인구	고령자비율	노년부양비	
대구 서구	160,754	25.6	37.7	202,963	15.7	20.8	1.416
부산 영도구	109,889	28.8	44.9	129,515	19.6	27.4	1.320
강원 태백시	39,113	27.9	44.7	46,715	18.9	27.5	1.291
강원 평창군	38,699	31.7	51.8	40,427	22.7	34.1	1.277
충북 단양군	26,466	35.0	60.0	28,770	26.3	41.1	1.243
부산 사하구	303,000	21.6	31.3	334,762	12.9	17.3	1.236
부산 사상구	206,948	20.6	28.8	240,709	12.0	15.6	1.220
강원 홍천군	65,215	29.7	48.2	67,190	21.2	31.6	1.21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183,667	20.5	29.7	208,766	12.0	16.1	1.201
강원 정선군	33,354	30.9	50.6	36,701	22.6	33.7	1.191
충북 영동군	43,813	34.9	60.5	49,542	26.6	41.6	1.191
충남 부여군	61,481	37.3	66.9	69,017	29.0	47.1	1.189
부산 북구	275,580	20.0	28.6	299,182	11.9	15.7	1.156
부산 중구	41,145	27.9	41.2	45,377	19.8	27.4	1.153
부산 금정구	227,484	22.9	33.2	249,444	14.8	19.8	1.153

경북 고령군	30,142	32.8	54.2	34,117	24.8	38.1	1.142
경남 고성군	48,298	33.4	56.9	53,882	25.6	40.1	1.113
서울 도봉구	304,137	21.6	31.0	340,095	13.9	18.7	1.107
충남 서천군	49,509	38.6	70.9	54,768	30.9	51.6	1.099
경남 하동군	39,542	38.1	68.8	44,918	30.4	50.5	1.09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15, 2022년은 각 연도 인구센서스, 저자 직접 계산.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팬참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슈분석 2.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은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6년간(2017~2022)의 연령대별 순이동률*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인구(만 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만 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 연령대별 순이동률 : 연령대별 인구 1,0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지표

주거이동성 지수**로 살펴본 결과로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청년인구 순유입이 나타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계속 발생되었다.

** 주거이동성 지수 : 거주인구 1,000명 중 지역 간 인구이동자 수(유입인구+유출인구)

이를 종합하였을 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유출) 목적은 일자리 문제로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참여자 특성>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촌지역 참여자계		113,816	150,910	177,182	194,541	204,420
성비	남성	27.3	27.1	28.0	28.4	28.4
	여성	72.7	72.9	72.0	71.6	71.6
연령대 분포	60~64	1.2	1.4	2.8	2.9	3.2
	65~69	11.4	12.2	13.3	13.7	13.5
	70~74	24.7	24.2	24.1	24.2	24.7
	75~79	36.7	34.4	31.3	29.0	28.3
	80~	26.0	27.8	28.5	30.2	35.3
교육수준별 분포 ¹⁾	고졸 미만	58.3	59.7	58.5	57.1	56.2
	초·중·고졸 이하	50.8	51.7	49.2	47.3	46.0
		7.5	8.0	9.3	9.8	10.2
	고졸 이상	4.5	7.6	6.5	7.3	7.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자료.

향후 개선과제로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를 제안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비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진행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 붙임 : 1.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겨울호 주요 내용
2.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겨울호 구성
3. 『지역산업과 고용』 상시 원고모집 홍보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책임자	연구위원	권우현 (043-870-8221)
		담당자	연구원	최영주 (043-238-7608)



1.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2015년~2022년)를 활용하여 지역별 고령화 현황 분석
- 한국은 2015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2년 고령사회로 전환, 향후 2~3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이행 예상
 -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단위에서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읍, 면 단위의 고령화 비율이 높음
 - 최근 7년간(2015~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7%p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면 단위가 가장 빠름
- 기초 지자체의 고령화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 7년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미만) 지자체의 비중은 44%에서 10.4%로 감소한 반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지자체의 비중은 33.2%에서 51.6%로 증가
 -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이 군 지역임. 가장 높은 지자체는 2022년 기준 44.7%인 경북 의성군이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등이 40%를 넘음
 - 노인부양비(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22년 의성군이 90.0(전국 평균 24.9)임. 상위 20개 지자체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향후 5년 이내 노인부양비 100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시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빠름.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강원 태백시, 평창군, 충북 단양군, 부산 사하구 등이 전국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의 공통된 특성은 65세 미만 인구의 순유출과 65세 이상 인구의 순유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됨. 즉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인구이동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
-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에 비해 3~4배 가량 높은 수준임.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연령상승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영향도 작용한 것

- 고령화 상위 20개 지자체의 2022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 평균(0.43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경남 산청군 6.09명, 경북 봉화군 2.96명, 전남 고흥군 1.64명, 경북 의성군 1.52명 등
- 고령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에 놓을 가능성이 높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산재사고는 고령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
- 고령화 상위 지역은 팬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역외 이전 등을 유발하여 악순환 발생
- 고령화 상위 20개 지자체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
- 2022년 기준 구인배수(구인자 수/구직자 수)는 전국 평균이 0.708이나 고령화 상위지역인 전남 신안, 전남 함평, 전남 고흥 등은 1.7을 상회하여 인력 미스매치 심화
- 지역의 고령화는 지역소멸, 지역 일자리 문제, 지역 양극화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
-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노력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② 이슈분석 2.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봄
- 인구감소 시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성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 예상
 - 2017년 노년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추월, 2022년 24.6명, 2070년에는 100.6명까지 증가 예상(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2022년 고령화율은 17.5%이며, 광역 지자체로는 전남이 24.5%로 가장 높고 세종이 9.9%로 가장 낮음. 고령화 속도(고령화율 연평균 증가율)는 울산이 가장 빠르고 세종이 가장 느림
 -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22

년 152명이며, 광역지자체로는 전남이 219.8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49.3명으로 가장 낮음.

-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행태가 지역별 고령화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거론됨.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이동성 지수를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고찰
 - 연령대별 순이동률(연령대별 인구 1,000명당 순이동자 수)은 최근 6년간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인구(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 확인됨
 - 주거이동성 지수(거주인구 1,000명 중 지역 간 인구이동자 수(유입인구+유출인구))를 보면, 최근 6년간 모든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활발한 이동행태가 관찰됨. 서울, 인천, 세종, 경기도는 일관되게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됨
 - 2022년 대구, 울산, 경북은 이탈인구 총량에서 타 지역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도권으로의 이주행태가 뚜렷함
 - 2022년 노년층 이탈인구 총량에서 지역 내 이동 비율은 전국 평균 37.6%이나 전북은 50.9%, 제주 44.8%, 경남 43.7%, 부산 43.2%, 강원 41%, 충북 40.7% 등으로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을 보임
 -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 지속으로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산업 및 고용위기 초래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쇠퇴에 따라 지역에 남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
 - 인구감소지역의 주된 이주(유출)의 목적은 일자리 문제
 -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 2차 산업에 특화,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제조업 쇠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
- 인구감소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이 요구됨.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역량 강화
-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

③ 이슈분석 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방식이 필요함.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 제시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2022년 49.8%)은 도시지역의 2배가 넘는 상황. 노인일자리사업은 농촌의 노인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동일한 요건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농촌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학력, 농업 일 특성, 저소득, 인프라의 단조로움 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체제 필요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사업 추진 예상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되며, 예산지원 방식은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구분되어 운영체제가 이분화되어 있음
 -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배분은 지역 노인인구 규모, 지자체의 요구 및 사업 수요, 전년도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결정
- 2022년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88만 1,53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공익활동이지만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사회서비스형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아 여성이 접근하기 용이한 일자리사업임
 - 최근 5년간 사업량 확대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수도 꾸준히 증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수는 1,300개 수준으로 유지, 2022년 1개 수행기관이 평균 678명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과중 우려(질적 제고, 현장 수행체계개선 필요)
- 2022년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만 4천 명이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이 약 80%이며, 최근 5년간 농촌지역에서 ‘고령자친화기업’과 ‘취업알선형’ 등 취·창업형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짐
 - 참여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3:7수준이며, 75세 이상 후기 노인 비중이 63.6%임. 65세 미만은 비중은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
 - 참여자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졸 미만의 학력자이지만 고졸 이상이 매년 증가

하는 추세로 농촌지역에서도 고학력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2022년 농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는 313개로 군 단위 농촌지역 당 평균 3~4개 설치 운영되고 있음. 1개 수행기관당 평균 653.1명 관리하는 상황으로 적정 수준의 사업량 관리, 운영을 위한 수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도시보다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들은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은 농촌 인구고령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의의
-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
- 향후 개선과제로 첫째,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둘째,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필요,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농촌지역적 특수성 고려,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구분	내용 및 집필자
편집자의 글	권우현 편집위원장(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지역고용학회장)
이슈분석	-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지역별 고령화 및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 김문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사례	- 정인영(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사례와 시사점 -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최근 일본의 지역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일반연구	- 구자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지역노동시장
지역-산업 고용동향	-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현황 - 지역고용이슈

『지역산업과 고용』 원고모집 안내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공동으로 지역의 산업 및 고용현황과
일자리정책에 관한 정기간행물 『지역산업과
고용(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간 『지역산업과 고용』은 지역 산업 및
고용이슈 분석과 지역 일자리 사례 소개, 지역
일자리정책 분석 등에 관한 원고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지역 고용과 관련된 자유주제 원고

분량

A4 기준 10~12매 내외(hwp 파일 제출)
*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원고제출 및 기타 문의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사무처

간사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최영주 연구원
☎ 043-238-7608 ✉ yj1861@keis.or.kr